

“나로호 중순께 발사”

광주 온 안병만 교과부장관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1단 로켓 연소 시험이 러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달 중순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저녁 러시아로부터 연소 시험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가 8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연소시험이 최종 성공했는지 여부는 2~3일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교과부는 일단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며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시험 성공이 확실하다면 다음 달 중순께 나로호 발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상이나 최종 준비과정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8월 중순쯤 나로호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발사 시기는 한·러 양국 기술진들의 발사일정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공개할 계획이다.

/강필성기자 kps@

“쌀 조기 관세화”

9~10월께 결론”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9월이나 10월쯤 어느 정도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쌀 관세화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이 결론을 내면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쌀 조기 관세화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 개방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장 장관은 또 앞으로 각종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 안정형 직불제’로 통합될 경우 직불금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앞으로 저수지 설치, 농지 정리 등을 위한 농업 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업 부분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하고 경지 정리를 하는 SOC”라며 “농업 부분에 SOC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핑시스템·보안·재정·수송·선수촌 운영 등 총망라**광주 U대회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市 준비기획단 이달 초 출범…특별법도 활기**

2015년 광주에서 열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는 등 U대회 준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U대회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광주시 U대회 준비기획단도 이달 초 출범하며, U대회 특별법 제정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시는 “2015 광주하게 U대회 마스터플랜 및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보고서 작성” 용역을 8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용역에는 경기장 운영, 의료 및 도핑 시스템, 보안, 미디어 및 정보기술 분야를 비롯해

재정, 수송, 출입국 관리, 선수촌 운영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U대회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경기장 신축, 리모델링 활용계획 등 대회 인프라 구축 방안도 들여다운다.

시는 용역을 발주한 뒤 201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FISU가 대회 개최국의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회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FISU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과 별도로 U대회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U대회 개최 준비작업을 추진할 준비기획단도 이달 초 출범한다.

준비기획단은 김윤석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 직원들로 구성돼 U대회 특별법 제정지원, 조직위 구성 방안·활동방향 연구, U대회 마스터플랜 수립 등 업무를 맡는다.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지원 등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작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김영진·정의화 의원이 2015하게 U대회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정현 의원은 2011년 세계유산선수권 대회 등 이미 제정된 국제경기 지원 특별법에 U대회를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초의 국산헬기 ‘수리온(SURION)’이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출고 기념식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첫 기동헬기 ‘수리온’ 떴다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인 ‘수리온’ 시제 1호기가 개발에 착수한지 3년여 만에 출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에 이어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가 됐으며 한반도 전역에서 작전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헬기를 보유하게 됐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의 KAI 공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희 국방장관, 범부근 방위사업청장, 김홍경 KAI 사장을 비롯한 정부·업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UH 출고식을 거행했다.

2006년 6월 KUH 개발에 착수한지 38개월 만에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냈으며 오는 2012년 6월까지 200여대가 양산돼 전력화된다. 개발비로 1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연합뉴스

“합리경영” 금호 박찬법호 출범**“석유화학 계열 분리 가능성 전혀 없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끌어 갈 박찬법 신임 회장 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그는 특히 “재임기간 중 모든 판단과 결정을 추진하는 데 ‘합리’에 근거할 것”이라며 ‘합리경영’을 향후 그룹 경영의 핵심 모토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그룹 구조조정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하루 속히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그룹의 안정과 내실을 꾀하고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재임기간 중 모든 판단과 결정을 추진하는 데 ‘합리’에 근거할 것”이라며 ‘합리경영’을 향후 그룹 경영의 핵심 모토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그룹 구조조정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속도를 높여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하루 속히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그룹의 안정과 내실을 꾀하고 향후

다. 석유화학의 계열사 주식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그런 계획 없다”고 했다.

박찬호 전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 대표직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적절한 절차와 형식으로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찬법 체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박 회장도 “(박삼구 명예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한 믿을 그룹을 소신껏 이끄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신임 회장은 1969년 쿠데타에 입사, 2001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아시아나 대표이사 부회장, 항공부문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40년 동안 그룹의 유타리를 지킨 ‘금호맨’으로 박삼구 회장과 같은 45년 생으로 절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송법 통과 당시 CCTV 자료 제출하라”**현법재판소, 국회에 요구**

현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 TV(CCTV)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대리 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CCTV 자료에 대해 낸 증거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는 요구한 자료는 22일 국회 본회의 및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훤행한 CCTV 자료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부터 끝날 때까지 출입문과 비상출입문, 로비 등을 활용한 자료 전부다.

현재는 본회의 당시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

에 대한 모든 기록과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는 재투표의 적법성은 물론 대리투표 여부도 짚어야 할 때이며 그룹의 절차를 거쳐 박 전 회장이 해임된 만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없고, 석유화학 계열의 계열 분리 가능성도 ‘제로’라고 강조했

다. 현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김현우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의원 등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참고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변론을 꼭 해야하는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지난 23일 현재에

아이고… 지겨워라

시설**‘4대강’에 떠내려 간 지역 SOC 사업 예산**

‘4대강 살리기’ 예산 블랙홀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도로 건설 등 각종 SOC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역 현안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4대강 살리기도 좋지만 이로 인해 지역 민생경제가 초토화돼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2010년 도로건설 국고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도의 내년도 국도(國道) 건설 예산은 요구액에 비해 무려 71%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도 건설 예산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내년도 도로건설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주·전남 고속도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광양~전주 고속도로는 72%가 깎인 것이다.

예산이 대폭 깎인 경우는 도로 건설

만이 아니다. 철도 등 거의 모든 지역 SOC 사업과 서민지원·지역균형발전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는 4대강 살리기에 필요한 재원 6조7천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SOC 인프라 구축이 4대강 살리기보다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사회 기반이 취약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광주·전남은 더욱 그렇다. 성과가 불확실한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 예산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선 안 된다. 더욱이 철도·도로 등 민생과 직결된 SOC 예산의 삭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오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볼모로 하는 4대강 살리기는 안된다.

U대회 성공개최 위해 시민역량 결집해야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고 광주시 U대회 준비 기획단이 8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회 준비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될 예정이다.

대회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선결조건인 U대회 특별법 제·개정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김영진·정의화 의원이 U대회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정현 의원은 2011년 세계유산 선수권 대회 등 이미 제정된 국제경기 지원 특별법을 개정시킬 예정이다.

세계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시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약속한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교통

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이같은 외형적인 준비 뜻지않게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인권도시에 이어지지 않는 ‘교통사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한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시급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역시 시민의 뜻을 모아 차질없이 준공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계 170개국 1만 3천여명의 대학생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와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부터 성공 개회를 위해 시민들의 자제를 모아야 한다.

‘2차 시국선언’ 전교조위원장 파면**교과부, 간부 등 89명 중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호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과연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 위원장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달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호 전교조 위원장을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과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